

[종합·해설]

“혹시나 했더니…” 올 국감도 정치국감 변질

좌편향 VS 우편향, 참여정부 VS 현정부 책임

‘정책 국감’ 실종 與野, 무의미한 네탓 공방만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책 국감’을 내세하며 국감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정치국감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場)으로 국감이 활용되보다는 상대 진영 정권의 실정을 마구잡이식으로 들춰내는 ‘네거티브 국감’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번 국감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대한 ‘총평’의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이번 국감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됐다. 실제로 지난 6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진 첫 국감에서는 여야 간의 케케묵은 이념대결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논쟁은 있으나 소득은 없는 무의미한 전·현 정권 실정공방, ‘네 탓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외교통상통일위의 지난 6일 국감에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를 둘파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기 보다는 신



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가 정회를 요구하며 고흥길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과서 문제와 집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에서는 세간의 관심 밖인 이념논쟁으로 물들었다. ‘좌’와 ‘우’의 편 가르기에 익숙한 정치권의 구태가 18대 국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코드 논란이 이어졌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코드인사들이 편파적이고 나눠

먹기식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며, 주호영(한나라당) 의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좌편향’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반해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예산이 증액됐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됐는데, 이는 정치적 코드에 의한 예산편파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원세훈 행안부 장관 밝혀

정부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한 가운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주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현 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하며,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제일 중요하며, 잘못 흔들다 보면 앞으로 하나도 진행 못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가 브리핑

“시정 질문 축소…집행부 눈치보기” 비난

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민주 광주시당 특보단장 윤봉근씨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시당위원장 특보단장에 윤봉근(51) 광주시 교육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윤 특보단장

은 광주시 제4·5대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운영위원 및 ‘광주 생명의 숲’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시당위원장 특보단장은 당원 및 비당원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 그룹으로서 시당위원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조언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의회 15~24일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4

일까지 10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또 다음달 17일부터 12월23일까지 37 일간 28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도정질의 및 교육행정, 교육청 예산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종교 편향 금지’ 조례 개정 추진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이 추진중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의 친절 의무를 규정한 복무 조례 제5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등 다른 자치구도 다음 달 안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김지율기자 redplane@

제2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장기대회!

광주시는 글

국민의 힘으로 광주시를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활발하게 변화시킵니다.
광주시에서 진행되는 종합무술연합회
개최장을 나누어주시는 행사를 위해 기부금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대회는 광주광역시

경기장으로 광주광역시